



보도시점

2026. 3. 20.(금)

배포

2026. 3. 20.(금)

지식재산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, 국가지식재산 정책 방향 논의

김민석 총리, 제39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 개최

- ▲아이디어창작으로 창업시대 실현, ▲강력한 보호체계 구축, ▲초격차 기술 확보

【관련 국정과제】 67. 기술탈취는 근절하고, 상생의 기업환경 조성

103. K-컬처 시대를 위한 콘텐츠 국가전략산업화 추진

□ 정부는 3월 20일(금) 오전,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「제39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」(이하 ‘위원회’)를 개최하였다.

< 제39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 개요 >

- 일시/장소 : '26.3.20. (금) 10:00~11:10 / 정부서울청사
- 참석대상 : 국무총리(위원장), 지식재산처장(간사) 등 정부위원, 민간위원 총 24명
- 회의안건 : ① 제4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('27~'31) 정책방향
② 기술선도 성장을 위한 특허심사 서비스 혁신방안
③ 국가지식재산 사무 총괄·조정 강화 방안
④ AI시대 미래형 역량을 갖춘 창의·발명인재 양성기반 강화 계획

□ 지식재산처가 출범하고 처음 개최된 이번 위원회에서는 ‘제4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('27~'31) 정책방향’ 포함, 총 4건의 안건을 논의하였다.

○ 특히, 오늘 논의된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 정책방향은 범국가적 중장기 지식재산 종합전략인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관계부처 및 지방정부의 수립지침으로, 새 정부의 비전과 정책목표, 전략과제 등이 담겼다.

□ 이날 회의에서 심의·확정된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1. 제4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(‘27~‘31) 정책방향

□ 정부는 “아이디어와 지식재산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”이라는 비전을 설정하고, 이를 달성하기 위해

- ① 아이디어·창작의 창업·사업화 실현, ② 공정하고 강력한 IP 보호 체계 구축, ③ 선도기술 초격차 확보, ④ 지역 균형성장 및 글로벌 협력 강화, ⑤ IP분야 AI 대전환이라는 5대 추진전략과 20대 핵심과제를 선정하였다. 추진전략별 핵심과제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① (추진전략1) 아이디어·창작의 창업·사업화 실현

- 국가 창업시대 도약을 위해 아이디어·지식재산(IP) 기반 스타트업을 육성*하고, 스타트업의 IP 확보와 경쟁력 강화 등 성장을 지원한다.

* 국민 아이디어 발굴·고도화, IP확보, 창업·R&D·사업화·정책제도화 등 범부처 협력강화

- 기업이 IP만으로 쉽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IP담보대출 지원수단을 다각화하고, 지식재산 중개기관과 거래 기반을 강화하여 IP거래 활성화를 추진한다.

② (추진전략2) 공정하고 강력한 IP 보호체계 구축

- 스타트업·중소기업의 아이디어·기술 탈취를 근절하기 위해 손해배상 제도를 개선하고 해외 기술유출 예방을 위한 민관협력 체계를 강화한다.

* 손해액 입증 없이도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 법정손해배상제도(최대 10억원)

- 특히, K-컬처의 지속적인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파생상품·연관산업에서 IP를 확보하고 K-컬처 IP 침해에 대해 민관 공동 방어체계를 구축한다.

* 외교·산업·농식품·해수·문체부 및 지재처와 식품협회·화장품협회·패션협회 등 공동대응

- 또한, IP 침해단속을 강화하며, 지식재산 사건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해 범정부 피해구제 지원체계를 구축*한다.

* (예) 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·중재 위원회, 저작권·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간 협력

③ (추진전략3) 선도기술 초격차 확보

- IP 데이터와 연구개발·산업·무역 데이터 등 이종(異種)데이터 통합분석을 통해 경제·과학기술·안보 정책 대응 역량을 고도화한다.

- 첨단·전략기술 초격차 확보를 위해 연구개발 전 주기에서 IP 전략을 활용하고, 핵심기술 해외특허와 ICT 분야 표준특허를 확보한다.

④ (추진전략4) 지역 균형성장 및 글로벌 협력 강화

- 지역특산품·향토문화유산 등을 기반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 대표 K-브랜드*를 육성하고 상품개발부터 사업화까지 종합 지원**한다.
- * 지역 전통시장, 특산품 등을 대상으로 '지역 대표 K-브랜드 100' 발굴·육성('26~)
- ** 국가·향토자산 관리·활용 협의체 구성, 상품기획전략 전문가 양성, IP 확보 지원 등
- 5극3특에 지역 스타트업·중소기업에 IP전략 및 경영·기술자문을 제공하는 지역 지식재산 지원 거점을 구축한다.

⑤ (추진전략5) 지식재산 분야 AI 대전환

- AI 학습데이터의 보호·활용, AI를 활용한 발명에 대한 인정 여부 등 AI 대전환에 따라 관련된 데이터·IP 쟁점을 검토하고 기준을 재정립한다.
- AI 역량과 IP전문성을 함께 갖춘 창의인재를 양성하고, 대학(원) 특허 교육과 기업 현장의 지식재산 전문교육도 강화한다.

2. 기술선도 성장을 위한 특허심사 서비스 혁신방안

- 정부는 특허심사 지연으로 인하여 수출기업의 해외특허 확보와 스타트업 투자유치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, 심사대기기간을 '29년까지 10개월 이내로 단축하고 이를 위해 대규모 심사관 증원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.
- 또한, 1개월 내에 심사결과를 받을 수 있는 초고속심사를 확대하고 원하는 대로 심사착수를 낮출 수 있는 낮은심사를 유연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한다.
- 특허권이 시장에서 더욱 높은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권리범위를 지나치게 좁히던 심사관행을 혁파하고, 규제중심의 심사기준을 고객 친화적으로 개선한다.
- 이외에도 위원회의 정책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전환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「국가지식재산 사무 총괄·조정 강화방안」과 「AI시대 미래형 역량을 갖춘 창의·발명인재 양성기반 강화 계획」을 심의하여 확정하였다.

담당 부서 <총괄>	국무조정실 산업과학중기정책관실	책임자	과 장	이대길 (044-200-2248)
		담당자	사무관	안성재 (044-200-2226)
담당 부서 <공동>	국가지식재산위원회 기획총괄과	책임자	과 장	이선우 (044-202-4231)
		담당자	사무관	방현석 (044-202-4232)
<1호안건>	지식재산처 지식재산정책과	책임자	과 장	한덕원 (042-481-5168)
		담당자	사무관	서효원 (042-481-8180)
	국가지식재산위원회 기획총괄과	책임자	과 장	이선우 (044-202-4231)
		담당자	사무관	장창석 (044-202-4233)
<2호안건>	지식재산처 특허심사총괄과	책임자	과 장	김영표 (042-481-5839)
		담당자	서기관	양웅철 (042-481-3595)
<3호안건>	지식재산처 지식재산정책과	책임자	과 장	한덕원 (042-481-5168)
		담당자	사무관	서효원 (042-481-8180)
	국가지식재산위원회 기획총괄과	책임자	과 장	이선우 (044-202-4231)
		담당자	사무관	방현석 (044-202-4232)
<4호안건>	지식재산처 지식재산인력과	책임자	과 장	조광현 (042-481-8172)
		담당자	서기관	구정민 (042-481-5187)

□ 개 요

- (일시/장소) '26.3.20.(금) 10:00~11:10 / 서울청사 9층 대회의실
- (참석자) **24명**(총리님 포함)
 - － 공동위원장 : 국무총리(주재), 이광형 민간위원장
 - － 정부위원(9) : 지재처장(간사), 과기정통부 과기혁신본부장, 중기부 1차관, 국무2차장, 공정위 부위원장,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, 문체부 문화미디어 산업실장, 기획처 미래전략기획실장, 국정원
 - － 민간위원(13) : 권수용, 김주섭, 김형철, 민경화, 민승욱, 박새롬, 신다혜, 최동규, 최진원, 한상수, 한수연, 한지영, 황보현우

□ 세부 일정(안)

시 간	주 요 내 용	비 고
10:00 ~ 10:10	○ 개회 및 모두 말씀 (10')	국무총리, 민간위원장
10:10 ~ 11:05 · 안건 발표 (15') · 심의·의결 (40')	○ 안건 보고 및 토의 (50')	
	- (1호) 제4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 ^(27~31) 정책방향(안)	지재처장
	- (2호) 기술선도 성장을 위한 특허심사 서비스 혁신방안(안)	지재처 차장
	- (3호) 국가지식재산 사무 총괄·조정 강화방안(안)	
	- (4호) AI시대 미래형 역량을 갖춘 창의·발명인재 양성기반 강화계획(안)	
11:05 ~ 11:10	○ 마무리 말씀 (5')	국무총리, 민간위원장

1. 제4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('27~'31) 정책방향(안)

I. 추진배경

- 제3차 기본계획('22~'26) 종료시점 도래에 따라, 제4차 기본계획* ('27~'31) 작성을 위한 수립지침을 중앙부처 및 지방정부 통보 필요
 - * 정부는 5년마다 지식재산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을 정하는 국가 지식재산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도록 규정(지식재산기본법 §9)
- 이에, 동 수립지침의 핵심내용인 제4차 기본계획 정책방향을 마련*
 - * 지식재산 정책환경과 현장의견을 바탕으로 이재명정부 국정과제와 연계하여 비전, 정책목표, 추진전략·핵심과제 등 정책방향 마련

II. 주요내용 (5대 추진전략 20대 핵심과제) (※ 세부내용은 「참고」 참조)

비 전	아이디어와 지식재산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
정책목표	◇ 지식재산으로 견인하는 혁신경제 ◇ 모두가 잘사는 지식재산 중심의 균형성장 ◇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지식재산 기반 확충

□ (전략1) 아이디어 · 창작의 창업·사업화 실현

- 아이디어·지식재산에 기반한 스타트업 육성 및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
 - * 국민 아이디어 발굴·고도화, IP확보, 창업·R&D·사업화·정책제도화 등 범부처 협력지원
- 기업이 지식재산·기술력만으로 쉽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IP 담보대출 지원수단 다각화, 정책금융 확대 및 제도개선 추진
- 지식재산·기술 거래 및 사업화와 특허·콘텐츠IP의 해외 수익화 촉진
- 아이디어를 경제성장 동력으로 전환시키기 위해 보상·보호 체계 강화

□ (전략2) 공정하고 강력한 IP 보호체계 구축

- 아이디어·기술 탈취 근절과 기술유출·특허분쟁에 대한 예방·대응 강화
- K-컬처 IP확보 확대, 침해 감시·단속, 국가·기업 공동 방어체계 구축
- 지식재산 침해단속·보호를 강화하고, 신속·정확한 IP 사법체계 구축

□ (전략3) 선도기술 초격차 확보

- IP와 R&D·산업·무역 데이터 통합분석을 통해 경제·과학기술·안보 정책 지원
- R&D全过程에서 IP전략 활용, 핵심기술 해외특허 및 표준특허 확보 강화
- 지식재산 심사인력을 확충하여 심사대기기간 단축 및 품질 혁신
 - * 심사대기기간 : [특허] ('25) 14.7개월 → ('29) 10개월, [상표] ('25) 11.9개월 → ('29) 6개월

□ (전략4) 지역 균형성장 및 글로벌 협력강화

- 지방 특화산업·문화유산을 IP와 융합하여 지방주도성장 지원체계 구축
 - * 지역 전통시장, 특산품 등을 대상으로 '지역 대표 K-브랜드 100' 발굴·육성
 - ** 5극3특에 IP창출·거래·사업화·분쟁대응을 원스톱 지원하는 '지식재산 종합지원센터' 설치
- 개인, 창작자·소상공인 등 국민들의 지식재산 이해력 및 인식 제고
- 지식재산 분야의 전략적 실용외교 및 단계적 남북IP 교류·협력* 모색
 - * 남북 IP제도 상호교육, IP데이터 교환, 연구정보 제공 등 → 상호간 IP출원

□ (전략5) IP 분야 AI 대전환

- AI 대전환에 발맞춰 데이터·IP 보호제도 재검토 및 기준 재정립
 - * AI를 이용한 발명의 발명자 판단 및 특허성 판단 기준 재정립 등
- 민간 IP 산업의 AI 전환을 지원*하고, IP데이터 개방 및 법·제도 정비
 - * IP조사분석, 가치평가, 침해여부 판단, 위조상품 모니터링 등 지식재산산업 분야 R&D 추진
- 지식재산 행정시스템과 대민 공공 IP서비스에 AI 도입 확대
- 초·중·고 및 대학(원)의 발명·IP 교육을 AI 기반 발명·IP 교육으로 전환하고, 이공계 대학(원) 특허교육 및 기업실무자·연구자 맞춤형 교육 강화

Ⅲ. 향후계획

- 제4차 기본계획 수립지침 통보(~4.30, 관계부처 및 지방정부)
- 제4차 기본계획 초안 마련(~9월) 및 공청회 등 의견수렴(~10월)
- 제4차 기본계획(안) 지재위 안전상정 및 확정(11월, 본회의)

《 비 전 》

아이디어와 지식재산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

정책
목표

- ◇ 지식재산으로 견인하는 혁신경제
- ◇ 모두가 잘사는 지식재산 중심의 균형성장
- ◇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지식재산 기반 확충

추진전략

핵심과제(안)

1

아이디어·창작의
창업·사업화 실현

- 1 아이디어·IP 기반 창업 및 성장 촉진
- 2 생산적 금융 전환을 위한 IP 금융 활성화
- 3 IP·콘텐츠 거래 및 해외 수익화 확대
- 4 지식재산 창출 및 활용 기반 조성

2

공정하고 강력한
IP 보호체계 구축

- 1 아이디어 및 기술탈취 근절
- 2 기술안보 및 특허분쟁 대응 강화
- 3 K-컬처 IP 침해 예방 및 강력 대응
- 4 신속·정확한 IP 집행·사법체계 구축

3

선도기술
초격차 확보

- 1 IP 데이터 기반의 국가 경영전략 지원
- 2 IP를 통한 연구개발(R&D) 혁신
- 3 첨단·전략기술 표준화 및 표준특허 확보
- 4 혁신성장을 위한 IP 심사·등록 고도화

4

지역 균형성장
및
글로벌 협력강화

- 1 IP 기반 지방주도 성장 지원체계 구축
- 2 IP 인식 제고 및 존중 문화 확산
- 3 IP 분야 전략적 실용외교 추진
- 4 남북 IP 교류·협력 기반 조성

5

IP 분야
AI 대전환

- 1 AI 대전환 시대, 지식재산 제도 재정립
- 2 민간 IP 산업의 AX 전환 촉진
- 3 IP 행정·공공 분야 AI 도입 확대
- 4 AI 시대 IP 창의인재 양성 및 IP교육 강화

2. 기술선도 성장을 위한 특허심사 서비스 혁신방안(안)

□ 추진 배경

- (현황) 지난 20년간 특허출원이 지속 증가하여 양적으로는 성장* 하였으나, 질적성장은 미흡**

* '05년→'25년(만건): (출원) 19.8→26.3(33.0% ↑), (등록) 10.6→15.7(48.1% ↑)

** AI분야 출원('14~'23)은 세계 3위이나, 피인용지수, 특허영향지수는 각각 28위, 33위(KISTEP, '21)

- (문제점) ①현저히 지연된 심사기간, ②취약한 특허품질 및 ③현장과 괴리된 심사시스템으로, 기술혁신을 선도하는데 한계

- (①심사속도) 주요국 대비 느린 심사속도가 '보이지 않는 규제'로 작용

* 주요국 특허 심사대기기간('23, 개월): 한²⁵ 14.7, 일 9.5, 유럽 5.0, 중 13.2, 미 20.5

현장목소리 "국내심사가 늦어 제품 사업화에 많은 차질"(운송로봇 스타트업 트위니, '25.3)

- (②특허품질) 취약한 심사여건*은 고품질특허 창출의 걸림돌

* 유럽 심사관이 일주일에 특허 1~2건을 심사할 때 우리나라 심사관은 하루에 1~2건 심사 → 심사 및 특허 품질순위: 유럽>미>일>한국(4위)>중 (英IAM매거진, '24)

현장목소리 "국내심사로 권리범위가 협소하게 설정, 주력시장인 美에 먼저 출원"(삼성디스플레이, '25.4)

- (③심사시스템) 시장의 기대에 못미치는 심사제도*는 우리기업의 기술혁신 의지를 위축시키는 요인

* 국내 중소기업이 심사절차를 중도포기한 사유로 "복잡한 절차와 까다로운 심사기준"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35.5%, "자금부족(41.5%)"에 이어 두번째('23, 중기중앙회)

⇒ 지식재산 기반 진짜 성장을 견인하는 특허심사 서비스 혁신 필요

□ 주요 내용(3대 추진전략 10대 중점 추진과제)

① (전략1) 시장이 원하는 실용적 심사속도 구현

- (심사기간 단축) 심사인력 증원 등을 통해 '29년까지 심사대기기간을 10개월內, 심사종결기간을 16개월內로 단축

* 중장기적 심사관 대폭 증원방안을 신속 추진할 것(이재명 대통령, 제21차 대수보 회의, '26.1.29)

"청년 석·박사 & 민간 경력자 2-Track 증원"

- (청년 석·박사) AI·양자 등 신기술 분야 이공계 우수인재 채용 → 최신 기술 대응
- (민간 고경력자) 반도체 등 주요산업 민간퇴직자 채용 → 기술유출 방지 및 노하우 활용

- (고객수요에 부응하는 심사속도) 신속한 특허확보를 지원하는 초고속 심사 확대, 특허확보의 유연성 제고를 위해 늦은심사 제도 개선*
* 늦은심사 신청 후, 시장상황 및 기업여건 변화에 따라 언제든지 일반심사로 전환 가능
- (인력운영 고도화) 중장기 인력수급 로드맵 구축, 심사관 재교육을 통한 인접분야 재배치 등 심사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

② (전략2) 시장가치 창출을 촉진하는 특허품질 혁신

- (출원품질 제고) 고품질 출원환경 조성을 위해 AI 등 분야별 특허 출원 지침을 수립하고, 대리인 수입료 및 특허수수료 개선방안 검토
- (심사관행 혁신) 규제중심 심사실무 및 기준을 기업친화적으로 개선
- (심사전문성 강화) 유럽식 3인 협의심사 확대* 및 현장형 기술교육체계** 구축
* (현행) 반도체, 이차전지 등 신설조직에 국한 → (개선) 수출 15대 품목분야로 확대
** 국내외 연구기관·대학과 연계한 위탁교육 프로그램 신설
- (심사품질 관리 고도화) 심사품질 관리를 예방적 품질관리 체계로 전환하고, 혁신기술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품질관리지표 수립

③ (전략3) 고객친화적 심사시스템 구축

- (소통형심사 강화) 기업들과 소통을 강화하는 적극심사* 활성화 및 규제개선 수요를 적극 발굴하기 위한 심사 옴부즈만 제도 도입
* 심사과정에서 출원인과 소통하여 특허의 권리범위를 함께 설계
- (특허제도 개선) '29년 PLT*(특허법조약) 가입, AI, SW와 관련된 특허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법·제도 개선 추진
* 특허출원 절차 간소화, 언어제한 폐지, 권리회복기간 부여, 공증·인증절차 완화 등
- (글로벌 협력 강화) 우리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심사협력* 강화
* (선진국) 특허권의 안정성 제고를 위해 국가간 협력심사(동일출원건 대상) 시행
(신흥국) 韓특허를 외국에서 신속심사하거나(PPH), 韓특허를 그대로 인정해주는(PRP) 심사협력 확대

□ 향후 계획

- 특허심사 서비스 혁신 관련 법제 및 실무 개선 등 이행과제 추진('26~)

3. 국가지식재산 사무 총괄·조정 강화 방안(안)

I. 추진배경

-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및 지식재산처가 국가지식재산 사무 총괄·조정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·규정 정비 필요
 - * 국가 지식재산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기 위해 지식재산처 출범('25.10)

II. 주요내용

- **지재위의 정책집행 실효성을 위해 의결 권한 명문화** (지식재산기본법 §6)
 - 지재위 심의에 구속력·실행력 담보를 위해 '심의·조정'을 '심의·의결'로 강화
 - * 정책 실효성 제고를 위해 지재위 기능을 '심의·의결'로 전환 권고('25.12, 입법조사처)
 - 지재위를 '대통령' 소속에서 '국무총리' 소속으로 변경(지식재산처도 총리 소속)
- **지식재산 관계법령 제·개정 시 협의절차 명확화** (지식재산기본법 §13)
 - 지식재산 관계법령의 제·개정 시 국제규범*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관계부처·지방정부의 지재위 협의절차를 명확히 규정
 - * 파리협약(특허·상표 등), 베른협약(저작물 등), WTO 지식재산권 협정(TRIPs) 등
- **지식재산 정보 수집·분석 및 제공업무 실효성 강화** (지식재산기본법 §31)
 - 지식재산 정보 수집·분석 및 제공에 대한 세부 업무내용, 처리절차 및 수행체계 등을 시행령에 규정할 수 있는 근거규정 신설
- **전문위원회 개편 및 지식재산정책책임관 활성화** (지식재산기본법 시행령 §5)
 - 지식재산(IP) 핵심임무* 중심으로 지재위 전문위원회 개편
 - * (현재) 창출, 보호, 활용, 기반 신지식재산 → (향후) 전략기획, 진흥성장, 보호·집행, 활용·사업화
 - 지식재산정책책임관*에 대해 안건 검토, 이견조정 등 업무 부여
 - * (관계중앙행정기관) 고공단 또는 3급 상당 공무원, (시·도) 3급상당 공무원

III. 향후계획 : 지식재산기본법 및 시행령 개정 추진('26.4월~)

4. AI시대 미래형 역량을 갖춘 창의·발명인재 양성기반 강화 계획(안)

I. 추진배경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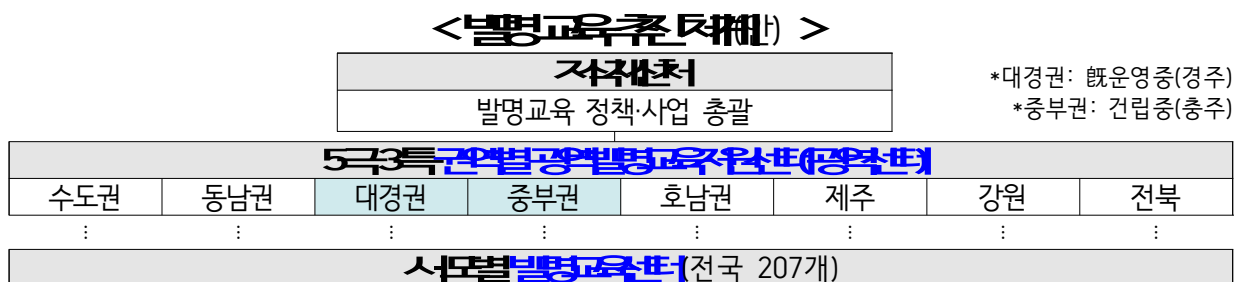
- AI 시대 산업구조 및 노동환경의 변화로, 창의력 및 문제제기능력, 비판적 사고 등 인간만이 발휘할 수 있는 역량 계발 필요
 - 발명교육은 실생활 문제 발견·해결 과정을 통해 AI 시대 인재 양성에 최적화된 교육이며, 아이디어 구상 및 비즈니스 모델 구체화 등의 경험을 제공하여 창업생태계 핵심인재 조기육성에도 기여
- 정부는 발명교육법 제정('17) 이후 발명교육센터(207개) 구축, 광역센터 운영, 교육과정 전면 반영 등 제도·인프라 기반을 지속 확충해 왔으나,
 - 협력체계 부재, 콘텐츠 노후화, 발명교원 부족 등 질적 고도화 과제 산적

II. 주요내용 (3대 추진전략 9대 중점 추진과제)

목 표

- ◆ 광역발명교육지원센터: ('26) 영남권 1개 → ('30) 5극3특으로 확대
- ◆ 전국 발명센터^{207개} : 프로그램 고도화 및 담당인력 전문성 제고
- ◆ 발명교육 인증교사 : ('25) 1,108명 → ('30) 1만 명 (학교당 약1명, 학교 11천여개)

□ (전략1) 5극3특 기반 전국 광역발명교육 거점 구축



- 지역 교육격차 완화를 위해 5극3특으로 광역센터 단계적 확대(~'30)
 - ※ 신속·효율적 확산을 위해 신규 광역센터 공모기준 및 건축절차 가이드라인 마련('26)
- 지역별 과학관*·박물관, 기업 등 지역 인프라를 연계하여 광역센터별 차별성 있는 콘텐츠를 구비하고 발명교육 확산 및 인식제고
 - * (예) 5개 국립과학관과 전시콘텐츠 공유, 교육과정 공동개발, 강사 파견 등
- 광역센터의 지역거점 역할(인프라 취약지역 지원, 지역내 발명센터 관리 등)을 확립하고, 운영협의회를 통한 성과점검 등을 통해 효율성·안정성 확보

□ (전략2) 전국 발명교육센터^{207개} 운영 효율성 및 교육품질 제고

- 학령인구 감소 추세에 대응하여 센터 신설·통합 등 재정비 방안 마련, 개정 교육과정 및 신기술을 반영한 공통교육 프로그램 전면 개정*

※ 전국 발명교육센터별 운영평가 등 데이터 분석·연구 및 신설·통합 수요조사 실시('26)

* 발명교육센터 정규 교육과정 공통 커리큘럼('18 제작) 개정

- 발명교육센터 근무 교원 인센티브* 제공(전국 교육청 협의) 및 교사 간 교류·연수 확대**를 추진하여 센터 교육 품질을 상향 평준화

* 발명교육센터 담당교사 근무여건 개선, 승진·전보 가산점 부여 등

** (현재) 센터에 신규교사 발령 시 전임자에 의해서만 인수인계 → (개선) 신규교사 대상 단계별 교육 제공, 권역별 교원 네트워크를 통한 타 교사 경험 공유·전수

- 초등돌봄·교육(교육부) 연계를 통해 초등학생 대상 발명교육 확산*, 학교 밖 청소년 등 취약계층 대상 발명교육 법제화(발명교육법 개정) 추진

* 초등학교 內 발명교육센터(110개)를 초등돌봄·교육공간으로 활용 추진, 교육시간에 발명강사를 파견하여 발명교육센터 콘텐츠 제공 등

□ (전략3) 발명교육 정책의 체계적 추진 기반 강화

- 교육부-^{17개}교육청-지재처 간 'IP교육협의체' 구성 및 산업계·학계 등 민간 전문가 중심의 '발명·IP교육 정책자문단' 발족

→ 교원 인사, 예산, 정책현안 등 협의를 위한 범부처 협력기반 마련

- 발명교육 인증교사 확대를 위해 교육센터 신설 등 교육·연수 접근성을 높이고, 인증교사에 대한 우대조치 확대 추진

- 발명교육이 지식재산 전 영역(저작권·브랜드 등)을 포괄하도록 중·장기 방향성을 설정하고, 발명교육개발원을 통해 교육 프로그램* 연구·개발

* AI-발명 네이티브 인재 양성 교육모델, 기존 교육에 발명을 더한 융합형 프로그램 등

Ⅲ. 향후계획

- 5극3특 광역발명교육지원센터 단계적 구축을 위한 예산확보 등 추진('26~)

- 지재처-교육부-교육청 간 'IP교육협의체' 및 민간 자문단 발족('26.下~)